

전직 언론인 등 대통령과 만찬서 쓴소리

“대통령님, 고개 더 숙여야”

安家서 ‘바비큐 파티’... “국민 공감대 형성해야” 민심 전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지난해 대선 때 자신을 도운 전직 언론인 출신 등 40여명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安家·안전가족)로 초대해 비공식 만찬을 가진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안가의 야외테니스 코트에 자리를 깔고 고기를 굽고 빈대떡과 샐러드에 소주를 곁들이며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이날 모임 참석자들은 대선 때 이 대통령을 도왔던 전직 언론인 출신모임인 ‘세종로포럼’ 회원들로, 이석준 전 한국일보 부사장, 김효재 전 조선일보 부국장, 김해진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박희태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류우익 대통령실장, 이동관 대변인과 박재완 정무수석 등이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는 최근 미국 최고기전면수입 결정에 따른 심각한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한반도 대운하도 공감대 형성 없이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등의 쓴소리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더 고개를 숙여야 한다. 한술밥 식구로서 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광우병 쇠고기”는 잘못 알려진 축면이 있지만 그게 현실이다. 여론은 무서운 것이다” “대운하는 밀어붙이지 말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등의 말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요즘 어렵지만,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이 대통령이 안가를 부쩍 자주 찾았다고 한다. 당선자 시절 건물 200㎡(60평)의 2층 양옥집인 이곳에 두 달

있는데, 테니스 코트도 있고 조용하다며 마음에 들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주말에 이곳에서 외부 인사들을 만나고 있을 뿐 아니라 평일에도 일과 후 이곳을 ‘제2의 집무실’처럼 사용하고 있다. 류우익 실장도 김형오 의원을 각각 이곳으로 불러 당 준비와 관련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고려대 동기인 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송정호 전 법무장관도 이곳에서 대통령과 저녁식사를 하며 시중 민심을 전했다고 한다. 한편, 안가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궁정동 등에 모두 12채가 있었으나,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군사정권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삼청동 안가를 빼고 모두 없애버렸다.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에만 잠시 이용했을 뿐, 거의 찾지 않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李 대통령 “서로의 차이를 넘어 화합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정치권 ‘통합과 조화의 정치’ 다짐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상위(不相違; 대중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함)의 정신을 마음에 담아 항상 국민의 뜻을 살피고 국민을 섬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봉축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과 함께 땀흘려 노력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일궈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한민국이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더없이 소중한 자산이다. 특히 서로의 차이를 넘어 널리 화합을 이루는 원융무애(圓融無礙) 사상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가슴에 꼭 새겨야 할 대승적 통합과 상생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이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통합과 조화의 정치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왼쪽부터), 통합민주당 손학규, 박상천 공동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가 한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통합민주당 차 영 대변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화합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건강하고 강력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부처님의 자비심

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훈 대변인은 “사회적 불안과 긴장, 분열이 해소되는 통합의 사회가 되길 기원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최대한인 쇠고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조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복당 최후통첩... 차 어디로

“5월 말까지 결정돼야” 압박... ‘탈당 불사’ 등 추후 행보 주목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11일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복당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11일 호주와 뉴질랜드 방문을 위해 출국하면서 한나라당 지도부를 향해 탈당할 친박계 인사들의 복당문제를 5월말까지 결정돼야 한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 향후 박 전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전 대표의 일련의 발언을 종합하면 일괄복당 요구가 시한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신의 거취문제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박 전 대표는 탈당 또는 당내 투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박 전 대표의 요구가 5월말

이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당 지도부의 발언을 보면 해결이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오 의원이 지난 10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장수는 전장을 떠나지 않는다”며 정치일선 복귀의사를 분명히 밝혀 당내 역학구도도 박 전 대표에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12일 현재 정치권에선 박 전 대표가 탈당도 하지 않고 7월 전당대회에도 출마하지 않은 채 비주류로서 당내 투쟁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국내 정치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탈당과 같은 모험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벌써 민심으로

부터 멀어져 가는 여론의 상황을 볼 때 그렇지 않은 당 지도권이 자신에게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당에 있으면 박 전 대표도 한나라당 정책 실패의 명예를 뒤집어 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탈당을 불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하고 있다. 민주당에 유일대안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전에 박 전 대표의 선택으로 차기 대권을 준비해야 한다는 전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희박하지만 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 박 전 대표가 극적인 화해를 통해 당 대표로 거듭나는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복당 원칙 줄다리기

‘檢 수사 대상자 복당’ 핵심쟁점 부상... ‘선별 복당’ 절충안도

선거법 위반 혐의에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문제 인사들’의 처리 방법이 한나라당 복당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10일 청와대 회동을 계기로 복당 문제가 최대 이슈로 다시 부상한 상황에서 당 지도부나 주류측은 대체로 복당은 불가피하지만 ‘문제 인사’들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박 전 대표를 비롯한 친박측은 일괄복당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대립은 이어지고 있다. 당 주류측이나 지도부는 친박 인사들을 복당시키더라도 ‘선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친박연대의 서청원 공동대표와 양경태, 김노식 당선자 등 3명이 ‘배제 대상’이다. 한 주류측 핵심인사는 12일 “김 푸수수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중인 이월까지 무원칙하게 복당시킨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 핵심당직자도 “복당 문제는 나중에 보자고 했지만 이제 그렇게는 안될 것 같다”면서도 일괄복당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복당시킨 뒤 검찰수사 결과를 이유로) 내치려 했다가는 내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청와대 회동에서 일괄복

당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박 전 대표를 비롯한 당파 친박 인사들의 입장은 완강하다. 친박연대 홍사덕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박 전 대표의 입장은 복당 이후 검찰 수사에 뜻하지 않은 게 나오면 그때 가서 처리하면 될 일이지 혐의만 가지고 예단해서 복당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주류측은 ‘선(先) 문제인사 배제, 후(後) 선별복당’이라는 입장을, 친박측은 ‘선 일괄복당 원칙 천명, 후 문제인사 출당’ 입장을 견지하며 대립하는 양상이어서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합뉴스

靑 “李 대통령, 차에 당대표 제안했으나 고사”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당 대표직을 제안했다고 청와대측이 12일 밝혔다. 그러나 박 전 대표측은 “당 대표직은 당원들이 선출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이 권유할 사안이 아니다”며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회동 중에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표에게 ‘당의 구심점이 돼 달라. 그러면 친박 복당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를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사실상 당 대표직을 제안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이미 당 대표를 안 맡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맡겠느냐”며 고사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처음 들은 것으로 박 전 대표에게서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서 “당 대표는 당원들이 선출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의 권한도 아닌 대표 문제에 대해 선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구직·운전·모집·초빙·영입·모임·매입·매매·임대·전세·부동산. 이메일: design@kwangju.co.kr. 직통: (062)227-9600. 문의: (062)220-0553. FAX: (062)227-9500.

분묘 개장 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해 제2차 및 동급 시정규칙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구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일괄로 개장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631-2, 694-1, 708, 697-2, 894-1, 8187-2, 8188, 8189, 8198-2, 8194, 8193, 8197, 81105, 8120-10, 산 120-2 (15평지내 41가). 2. 개장사유: 대법국가신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3. 개장방법 및 일정: 유연분묘 - 영고자 또는 관리자의 합의개장 무연분묘 - 영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일의개장. 4. 개장장소: 영암군 삼호읍 서정리 산70(영암군 지정 공동묘지 내). 5. 공고기간: 2008. 5. 13. ~ 2008. 6. 12. (1개월). 6. 신고처: 영암군청 문화체육관광과 (☎061-470-3487) 삼호읍 사무소 (☎061-470-2812). 7. 신고시 구비서류: 분묘 영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기타: 위 분묘의 동일지에 추가 분묘 백성시에는 이 공고로 귀속합니다. 2008년 5월 13일 영암군수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부문)에 열정을 함께할 분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2. 전형방법. 3. 근무지. 4. 제출서류. 5. 접수방법. 6. 접수기간. 7. 우편접수. 8. 문의처. (주)이에스에너지 (주)이에스시스템

2008학년도 후기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신입생모집. 모집안내, 전형일정, 문의.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